

# 민정연 간담회 토론문

김윤태 (고려대 교수, 사회학)

## 프레임 전쟁의 한계

미국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전쟁’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선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선거에서 사용하는 의제, 정책, 용어가 프레임(frame)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이코프는 “진보주의자들이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오류”라고 믿었다. 진보주의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우파의 가치를 활성화하고 고유의 가치를 포기하여 정치적 지지자들을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치에서도 레이코프의 프레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레이코프의 주장은 2012년 한국 대선에서 심각한 오류를 만들었다.

2012년 대선의 선거운동 초반에 새누리당이 제시한 ‘박정희 대 노무현’의 프레임을 민주당이 따라갔다. 민주당 대 ‘독재자의 딸’이라는 선거 구도에 너무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 성공’이라는 자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으로 선거 구호를 바꾸었다.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 그럴 만 했다. 그러나 이미 유권자의 상당수는 박근혜와 이명박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민주당이 유행이 지난 방법으로 ‘이명박근혜’라는 용어를 만들어도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의 구호가 오락가락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메시지의 일관성을 상실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프레임이 아니라 플랜(plan)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막판에 승부수를 던진 ‘정권교체론’은 무력한 플랜이었다. 총선은 ‘회고 투표’, 대선은 ‘전망 투표’라는 상식에서 벗어나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과거사 논쟁과 정권 교체론에 철저히 매달렸다. 이에 대해 박근혜는 ‘시대 교체론’으로 맞섰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감세를 철회하고 진보진영이 내세웠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도 공약에 포함했다. 심지어 정당의 상징 색도 빨간색으로 바꿨다. 반공 콤플렉스를 조장하던 보수정당으로서는 놀라운 변화이다.

민주당은 ‘좌클릭’ 전략을 선택했다. 프레임 전쟁에 따라 진보진영에게 호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재벌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 없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뒤집은 새로운 공약은 커다란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구체적 민생 공약이 빠진 ‘관념적’ 좌클릭은 서민층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진보적 가치를 지키면서 중도층을 장악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 또한 중산층의 안보 불안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도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도 구호만 요란했지 피부에 와 닿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

가가 곧 좋은 일자리를 만든 것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플랜이 빠진 프레임 전쟁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주요 선거전략이자 핵심 구호였던 ‘정권 교체론’은 왜 아무런 효과를 만들지 못했을까?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가 높아도 미래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는 원칙이 그대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바뀌어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에 민주당의 공약과 정책은 미래의 전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복지국가도 경제민주화도 구호만 요란했지 국가의 새로운 비전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서민후보라는 막연한 구호만 존재했지만, 다양한 인구 집단의 욕구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맞춤형 공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 대통령론’을 둘러싼 논쟁은 민주당이 얼마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지 보여주는 희극이 되고 말았다.

선거에서 미래의 플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고려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안철수 현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새로운 정치개혁을 원하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후보단일화라는 정치 게임에 매달렸다.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안철수 현상을 정권 교체의 우군으로 포용하지는 못했다. 결국 안철수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로 문재인 후보는 저절로 ‘단일 후보’가 되었지만, 연합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가치는 사라졌다. 이미 ‘청와대 이전’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내세워 추락하는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모두 수용했어도 민주당은 후보단일화에 성공했을 것이다. 만약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고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대안을 제시했다면 단일화 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 지역주의 정치를 넘어서

2012년 대선에서 지역 대결 대신 세대 대결이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은 철저한 오류로 판명되었다. 1987년 이후 한국 대선을 결정했던 지역주의가 다소 완화되고 세대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정치적 지역주의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선거 변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있다. 거대한 인구를 가진 영남에서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주의 투표는 사실상 투표 결과를 좌우했다. 이는 1990년 ‘3당 합당’ 이후 영남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장악한 보수정당의 정치적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치적 요소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TK(대구 경북), PK(부산 경남)는 보수, 호남(전북, 전남)은 진보라는 공식이 무너지지 않았다. 대선후보의 지지율을 들여다보면 지역주의가 다소 완화된 측면도 있다. 박근혜 후보는 호남에서 10% 수준의 지지율을 얻었다. 1987년 직선제 실시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에서 39.8%의 지지율을 얻었다.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10% 포인트 상승했다. 그래도 지역주의의 균열을 그대로

반영하는 투표 결과는 아직도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견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요인은 수도권에서 예상외로 선전하고 충청, 강원, 경기 등 중원 지역에서 압승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후보는 서울에서 문재인 후보를 바짝 추격했고, 서울에서 뒤진 표를 중원에서 대거 만회했다. 비교적 지역주의가 약한 충청, 강원, 경기에서 지지율 격차를 크게 벌렸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사회와 정치를 냉정한 눈으로 본다면, 오랜 냉전과 분단 구조로 인해 보수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사회이다. 오랫동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조직이 위축되어 있으며 진보정당에 대한 참여도 매우 낮다. 반면에 보수진영은 재벌, 대형 언론사, 대학과 손잡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힘만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는 보수진영의 분열, DJP연합,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등 외생적 변수에 의한 우연적 결과일 뿐이다. 어쩌면 2012년 보수와 진보와 맞대결에서 2.6% 포인트 차이의 박빙 대결을 벌인 것은 진보진영의 강화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선거 결과에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2002년보다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증가하고 진보 성향이 높아졌다는 점은 진보진영에게 고무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한국의 진보진영은 인구 고령화보다 더 결정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바로 지역주의 정치구조이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보수정당이 영남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호남당’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대선에서 ‘지역 연합론’과 ‘영남 후보론’은 진보 정치의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선거 승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전략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전략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진보진영은 변화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전략은 현재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주의 투표가 만든 심각한 결과는 바로 ‘계급투표’의 실종이다. 계급투표는 자신이 속한 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투표 성향을 가리킨다. 한국 정치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정당을 지지하는 ‘계급배반투표’의 현상은 진보진영의 커다란 족쇄이다. 지역주의 정치의 근본적 문제는 영남이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호남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비호남 지역(영남, 충청, 수도권)의 서민층과 중산층이 자신들이 사회경제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주의 정치를 무너뜨리는 진보진영의 전략은 비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하도록 돕는 것이다.

## 새로운 진보주의 전략을 찾아서

2017년을 위한 진보의 최우선 과제는 대대적인 자기개혁과 정교한 정치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진보진영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진보진영은 사분오열되어 있으며, 제1 야당인 민주당은 계파주의와 파벌주의로 아무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과 공약

보다 지도자와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같은 메시지라도 누가 전달했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민주당은 지금 2004년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의 시급한 과제는 폐쇄적 파벌을 해체하고 가치와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계파주의를 넘어 공당의 제도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진보진영의 새로운 리더십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조직과 연대하며 대중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는 지도자가 대중과 소통하며 만드는 예술이다. 새로운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대중 속으로 들어가 풀뿌리 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조직과 소통하며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진보진영의 풀뿌리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대중조직은 2007년 대선 이후 심각하게 취약해졌으며 수도권 조직의 기반도 매우 약화되었다. 아무리 공중전, 사이버전이 벌어져도 선거 결과는 지상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기층 당 조직을 강화하고 공천 제도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당원들이 정책 생산과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당 연구소를 개혁하고 정책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민주당 주위에 새로운 다양한 시민사회조직, 온라인 조직, 지식인, 싱크탱크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진보진영의 정치 이념을 재구성하려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보수진영이 내세우는 시장, 경쟁, 안보의 논리에 맞서 일관성이 있는 정치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주장한 연대, 정의, 사람, 노동이라는 거대 담론 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구호를 넘어 생활밀착형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좌클릭’과 ‘중도화’ 논쟁의 이분법은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 민주당은 중도 성향과 진보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동시에 이끌어내야 한다. 한편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과거에 비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정당은 유권자의 단면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 의제를 강조해야 하며, 정교한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정당도 체계적인 이념과 정책이 없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만약 운 좋게 승리한다 해도 이는 결국 정치적 재앙이 될 뿐이다. 제대로 준비된 계획 없이 집권했다가 보수적 가치와 이념에 휘둘려 개혁에 실패한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잘못된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